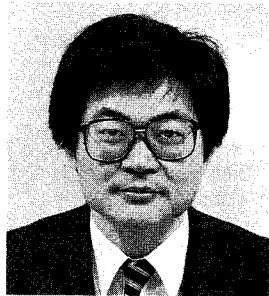


# “사회·정치적 합의” 노력해야...



曹炳來  
〈동아일보·사회부기자〉

우리나라의 환경관리는 공장폐수를 적당히 걸러내는 정도의 아주 초보적인 수준에서 출발했으나 이제는 환경관리가 단순히 기술적 감성적인 차원을 넘어 사회정치적 문화적인 단계에 접어들었다.

인류역사상 문명화에 따른 최초의 환경변화는 농경에서 비롯됐고 두번째 변화는 산업화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농경사회의 시작은 후세 일부 역사가들에 의해 「자연과 인간에 대한 약탈」이라고 규정되기도 했으나 결국은 상호파괴없이 수천년간 유지돼왔다.

그러나 산업화는 「환경파괴」 또는 「공해(公害)」라는 개념을 만들어 「약탈」이상으로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지고 있다.

불과 2백여년전에 서유럽이라는 지구상의 극히 일부분의 인간집단이 선택한 산업화라는 진로는 이미 자의든 타의든 전인류의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 되어 버렸다.

농경사회는 인간의 「약탈」능력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자연에 대한 「약탈」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의식적인 노력없이 자연과 환경의 자진복원이

충분히 가능했다.

그러나 산업화에 따른 환경파괴는 자연의 복원력마저도 파괴하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며 이미 국지적으로도 이같은 의견이 증명된 적도 있다.

따라서 이 의견이 옳다면 환경문제는 단순히 「냄새난다, 더럽다, 시끄럽다, 보기싫다」는 감성적 차원을 넘어서게 되는 것이다.

환경문제는 금세기 초에 부분적으로 사회문제화하기 시작했고 금세기말에 이르러서는 인류문제의 최고 단계인 국제정치문제화하고 있다.

「군비축소와 더불어 환경위협에 대한 대책」을 역설한 소련 고르바초프의 유엔연설(88년 12월), 환경문제에 대한 세계정상회의를 개최하자는 미국 부시대통령의 제의(88년 12월), 89년을 환경원년으로 정하고 「세계에 공헌하는 일본」을 표방, 국제적인 환경보호운동에 앞장서겠다는 일본의 외교방침천명(89년 2월)등에서 이같은 추세를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환경문제나 환경과학은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 대부분 환경관계자들의 의견이다.

문제는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노력이 부족한데 있다.

예를 들어 기업체에서 만드는 홍보물이나 견학코스에 오염방지시설이 포함되어있는 경우가 드물다.

또한 기자가 지난 2월 일본 큐슈(九州)여행중에 미쓰비시화성공장의 폐수처리시설과 후쿠오카(福岡)시의 쓰레기 매립장 방문이 주요 여행일정이었다는 사실에 『오죽하면 그렇게도 갈 곳이 없어 그런 곳에 갔느냐』는 말을 듣기도 했다.

서울 난지도 쓰레기매립장을 견학코스로 만들었다면 시청이든 시민이든 학교든 어떤 반응이 나

오겠는가.

중국의 만리장성이나 프랑스의 베르사이유궁전은 훌륭한 문화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방문객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히말라야오지나 남태평양의 쪽빛 바다도 자연 그 자체가 무한한 감흥을 주기 때문에 여행객이 몰려들고 있다.

그런데 이같은 「과거」의 문화와 현재의 자연을 모두 보호하는 오염방지시설은 왜 기피되어야 하는가.

또한 오염배출업소에 대한 환경처의 점검때마다 환경처는 업체가 점검때만 배출기준을 맞추는 경우가 많다는 의심을 갖고있고 업체는 점검이 일관성이 없다고 불평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같은 의심과 불평을 서로 해소하려는 노력이 여전히 부족하다. 환경관계법안의 정비를 위해 지난해 환경처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들도 지난 임시국회에서 상정되지조차 않았다.

국회국방위의 국군조직법개정안 변칙통과가 물의를 빚게되자 정치권은 여야간에 이견이 있는 법안은 처리하지 않기로 한 뒤 환경관계법안도 덩달아 이 방침에 따라 책상서랍속에 들어가 버리고만 것이다.

지난해 8월 상수원에서 중금속이 검출됐다는 한 정부연구소의 부정확한 조사자료로 전대미문의 「물파동」이 일어났으나 「국민에 대한 경각심은 높았다」는 정도로 끝났을 뿐 환경관례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의 기회가 되지 못했다.

단지 그동안 추진해온 환경청의 부처승격이 당겨졌고 세제잉여금중 일부가 환경보전에 투자될 것이라고 한다.

또한 환경처승격에 따라 환경처의 일용잡급직(환경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대부분이다)이 정식 채용됐고 91년도부터는 환경공무원을 공채키로 했다.

이런 몇몇 진전사항은 환경업무 종사자에게는 고무적인 일이지만 사회적 인식 전환과 정치적 합의를 이루기에는 절대적으로 미흡하다.

지난1월 소련에서 열린 모스크바환경포럼은 이미 환경문제가 철학적·종교적 차원에서 다루어졌다.

우리는 이제 겨우 사회적 차원에서 논의가 일고

있으나 그나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환경관리가 산업활동의 부수적인 업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며 인류가 두번째로 택한 대전환(산업화)의 핵심문제라는 점을 대부분 전혀 알고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전의 농경사회가 비록 자연을 「약탈」했었다 할지라도 사회적으로 제한을 가했기 때문에 오랜 기간의 농경에도 자연이 파괴되지 않았듯이 현재의 환경문제도 사회적 합의와 절제가 있으면 해결이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환경문제는 단순한 기술개발이나 오염방지비의 투자로는 제한이 있고 부담만 커지는 역작용이 있다.

일본 환경청의 한 관리는 석유류에 의한 대기오염방지에 엄청난 비용을 들여 겨우 환경기준을 달성했지만 사회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방향을 정하지 못해 엄청난 낭비도 있었다고 충고한 적이 있다.

일본의 예를 보더라도 환경과학의 발전과 오염방지가 사회적 인식과 정치적 노력에 의해 어떻게 좌우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따라서 환경업무 종사자들은 단순히 환경기준에 맞춰 폐수는 방류하는등의 일에만 몰두해서는 안되리라 생각한다.

사회적 정치적 합의를 위한 인식과 노력이 당연히 있어야하며 이는 환경관리인에게도 사회적 정치적 활동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당연히 환경관리인의 사회적 정치적 지위와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다.

법률가는 처음에는 단순한 법률기술자에 불과해 하층계급에 속했으나 근대국가가 법치주의 이념에 따라 설립됨에 따라 현재는 상당한 지위와 더불어 사회를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되고 있다.

환경관리인은 법치주의 국가 설립이라는 역사적 비교적 짧은 시기의 변화보다는 더욱 거대한 사회변화에 인류를 적응시키는 위치에 있는 만큼 앞으로 사회발전의 동력이 되어야 함은 마땅하다.

이미 모스크바환경포럼에서 나타났듯이 환경인이란 철학자이고 종교가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 실정으로는 요원한 일이겠으나 환경관련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는 언젠가는 추구해야 할 일이다.